

수저계급사회에서 스웨덴을 말한다:

Why not Sweden?*

조 문 문**

스웨덴은 19세기 후반 인구의 절반이 굶어 죽거나 버리고 떠난 나라였다.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불평등 체제 피해자들의 ‘꿈의 나라’로 만들었다. 스웨덴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실현했기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이 글은 스웨덴을 벤치마킹하고자 제안한다. 그 이유는 다섯 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 스웨덴은 현존하는 가장 평등한 나라다.

둘째, 세계 최강 자본과 세계 최강 노동이 상생하는데 성공했다.

셋째, 스웨덴은 여성 등 불평등 체제 피해자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었다.

넷째, 스웨덴 모델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

다섯째, 스웨덴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이상적 사회를 만들고자 하더라도 스웨덴을 경유해야 한다.

주제어: 스웨덴, 수저계급사회, 불평등, 이행전략, 비개혁주의적 개혁

* 이 글은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24년 하반기 학술대회(2024.11.8)의 특별강연 “수저계급사회에서 스웨덴을 말한다; why not Sweden?”을 수정·보완한 것임.

**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스웨덴은 19세기 후반 인구의 절반이 굶어 죽거나 버리고 떠난 나라였다. 그런 스웨덴이 한 세기를 지나며 꿈의 나라로 바뀌었다. 오늘날의 스웨덴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불평등 체제의 피해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스웨덴을 자신들도 살만한 나라로 만든 것이다.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만든 나라이기에 불평등 체제 피해자들에게 ‘꿈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

불평등 대한민국이 평등한 ‘꿈의 나라’ 스웨덴을 벤치마킹하면 안될까?

1. 불평등 시대의 스웨덴 모델

자본주의 시장경제모델들 가운데 스웨덴으로 대표되는 스칸디나비아형 사회민주주의 모델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영미형 자유시장경제모델은 양극단을 구성하고, 대륙형과 지중해형 조정시장경제모델은 그 중간에 위치한다. 미국은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는 불평등한 사회를 대변하고 스웨덴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사회적 규제가 강한 보다 평등한 사회를 대변한다.

스웨덴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실현했기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1.1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통합의 동시 실현

영국 대처와 미국 레이건의 집권과 함께 진행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는 영미형 자유시장경제모델을 중심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희생하도록 압박했다.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들의 물적 자원과 미국 패권의 영향력으로 미국식 자유시장경제모델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었는데, 소련과 동구권 붕괴로 그 이데올로기적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중시하는 유럽 사회의 강점을 지킴과 미국식 자유시장경제 모델의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유럽의 사회적 모델(European Social

Model) 개념은 그 과정에서 형성되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들로르(Jacques Delors)가 1980년대 중반 미국식 시장 지배 자본주의 모델에 맞선 유럽식 대안의 의미로 처음 사용하며 통용되기 시작했다.

유럽의 사회적 모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로 시장에 대한 국가의 민주적 개입, 무상 의무 교육, 교육·훈련 기회의 공정한 배분, 모든 시민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강건한 복지제도,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억제, 노동조합 등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보장, 기후위기에 주목하는 적극적 환경보호가 꼽히고 있다(SEJ 2008). 유럽연합은 유럽의 사회적 모델에 입각하여 회원국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헌신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2000년 3월 리스본전략(Lisbon Strategy)을 채택하여 10년간 추진했고 이후 ‘유럽 2020(Europe 2020)’로 이어갔다.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리스본전략의 경험적 준거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구현한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모델 국가들이었다(European Commission 2005; Rodrigues 2009).

스웨덴과 스칸디나비아모델의 진가는 2008-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더 빛났다. 영국 중도 보수 주간지 《The Economist》는 민영화와 작은 정부, 탈규제와 자유 시장, 시장개방과 자유 교역을 핵심 기조로 삼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미국식 자유시장경제모델의 신봉자다. 1979년 영국 총선의 대처(Margaret Thatcher) 지지 선언과 1980년 미국 대선의 레이건(Ronald Reagan) 지지 선언으로 대처-레이건 중심 신자유주의 패권 형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런 《The Economist》(2013a, 2013b, 2013c)가 2013년 북유럽 특집호를 편집하여 스웨덴과 북유럽 모델을 극찬하며 벤치마킹하라고 독려했다.

《The Economist》는 “30년 전 마가렛 대처는 영국을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하게 하는 최첨단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그 명칭은 스웨덴으로 갔다” “당신이 평균적인 재능과 소득을 지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면, 당신은 북유럽인으로 태어나고 싶어할 것이다”며 신자유주의를 버리고 스웨덴과 북유럽 모델을 홍보했다. 남부 유럽은 경제적 경화증에 걸려 있고 미국은 극단적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는 반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생산성과 혁신 같은 경제적 지표들이나 불평등과 범죄 같은 사회적 지표들 가운데 어

면 지표로 보나 최고로 건강한 사회다”라며 극찬했다. 결론은 “좌파나 우파의 고집을 버리고,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 세계는 이제 북유럽 모델을 배워야 한다”로 마무리했다.

《The Economist》에게 스웨덴과 북유럽이 최선의 선택지는 아니었다. 스웨덴이 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너무 높고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조세부담율이 조금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복지제도는 보편주의를 고집하여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한다. 스웨덴이 19세기 말부터 1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고속성장한 국가라고 칭송하지만, 같은 기간 미국보다 더 불평등했던 사회가 훨씬더 평등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1970~80년대 정부의 기능 확대를 비판하지만 그 시기가 자본주의 사회로서는 하위 50%가 상위 10%보다 국민소득 점유율이 높았던 유일한 사례였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는다.

《The Economist》가 선호하는 시장경제모델은 공공지출 비중이 작고, 조세부담율이 낮으며, 복지제도가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영미형 자유시장경제모델이라는 점은 변함 없다. 하지만, 자유시장경제모델은 미국에서 보듯이 높은 불평등과 범죄율로 사회통합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실현한 스웨덴과 스칸디나비아모델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다.

1.2 후꾸야마의 ‘역사의 종언’과 불평등 문제

후꾸야마의 ‘역사의 종언’ 명제가 받은 비판의 핵심은 자본주의 체제가 평등 가치보다 시장의 자유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주의와 결합해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후꾸야마는 불평등 문제가 있지만 미국식 자유시장경제모델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첫째, 후꾸야마는 미국인도 평등 감수성을 지녔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한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Democracy in America)》에서 강조한 미국인의 “평등에 대한 열정(passion for equality)”은

경제적 지위의 평등이 아니라 존경과 존엄에 대한 동등한 인정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Fukuyama 1995). 미국사회는 사유재산제 원칙에 기초해 있고 미국인은 역사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상당 정도 수용해왔다고 주장한다.

둘째, 후쿠야마는 미국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매우 심하지만 미국 사회를 위기 상황에 빠뜨릴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불평등이 심할수록 그 폐해가 선형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기점을 넘어서야 불평등이 사회구성원을 정치적으로 양극화하며 사회갈등을 심화하고 체제의 정치적 정당성에 타격을 주는데, 미국은 아직 그 분기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다(Fukuyama 2011a). 한편,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보다 더 평등하지만 막대한 복지국가 지출로 재정적자 문제를 겪고 있어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게다가 미국인들은 미국이 서유럽 국가들보다 불평등은 심하지만 상승이동 기회가 많기 때문에 불평등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유럽의 발달된 복지국가 대안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고 본다.

불평등 문제에 대한 후쿠야마의 관점은 철저히 미국의 불평등 체제와 미국인의 인식을 준거로 하는 미국 중심주의다. 후쿠야마는 미국식 자유시장경제모델 이외에 스칸디나비아형 사회민주주의모델 등 다양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모델이 존재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지배계급의 불평등 이데올로기가 성공적으로 지배한다는 사실도 간과했다.

후쿠야마는 최근 일련의 저술과 인터뷰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는데,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스웨덴과 사회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Fukuyama 2022a, 2022b, 2022c). 후쿠야마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이후 미국의 현실을 분석하며 탈규제, 민영화, 건축재정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워싱턴 컨센서스는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후쿠야마에 따르면,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가 극단화된 형태로서 불평등을 극도로 심화시키고 금융위기를 유발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부유층에 비해 일반 서민들에게 훨씬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제 불평등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었다. 자본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정책을 통한 재분배로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나눠주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후쿠야마는 현재 미국에 필요한 것은 사회민주주의 정책이라고 진단한다. 과거 영국과 미국을 세계적 리더 국가로 만들었던 세 가지 요소는 강한 자본주의 국가, 국가의 재산권 보호와 법치주의, 정부의 모든 시민에 대한 호응성 원칙(principle of accountability)이었다(Fukuyama 2011b). 현재 미국에 절실한 것은 시민들의 요구에 답하는 정부의 호응성 강화인데, 호응성 원칙이 실종되며 시민 대다수를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배제하고 경제위기의 폐해만 부담 하도록 한다. 후쿠야마는 미국같은 부자 나라가 아직 보편주의 보건의료제도를 수립하지 못한 것은 조롱거리라며, 포용적 복지국가와 재분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호응성 원칙을 실천하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선언할 때도 스웨덴은 평등한 사회의 전형적 모델로서 소련식 국가사회주의와 미국식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타협책이라고 규정했지만, 미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대안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Fukuyama 1992). 이제 미국이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가의 적극적 역할로 불평등을 제어하지 않으면 미국식 자유시장경제모델로는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2008~09년 세계금융위기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2. 한국 진보정당 운동과 스웨덴 모델

미국식 시장주도 경제모델에 입각하여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세계은행(World Bank 2005, 2018)과 국제통화기금(IMF 2017)도 워싱턴컨센서스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인정하고 불평등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성장 우선주의에서 경제성장 혜택을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포용적 경제성장(inclusive growth)을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신봉자였던 《The Economist》는 미국 모델의 심각한 불평등 현상과 사회통합 실패를 지적하며 스웨덴 모델을 벤치마킹하라고 독려했다. 소련과 동구권 붕괴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 경쟁은 끝나고 모든 사회는 미국식 자유

시장경제모델의 자본주의로 수렴할 것이라며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던 후쿠야마도 미국 모델은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를 벤치마킹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모두 미국식 자유시장경제모델은 실패했다고 비판하는데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능력 부재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구현한 스웨덴과 스칸디나비아모델을 바람직한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다.

한국은 미국만큼 불평등도 심각하고 그에 대한 불만도 강하지만 시민 대다수는 스웨덴 모델이 아니라 미국 모델을 바람직한 발전 방향으로 간주한다.

2.1 노회찬의 대안, 스웨덴

한국도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 스웨덴 모델을 대안으로 설정하고 벤치마킹하고자 했으나, 벤치마킹 대상은 주로 복지 제도였다. 스칸디나비아형 사회민주주의모델과 그것을 형성하고 유지한 계급역학관계는 벤치마킹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 점에서 미국 모델을 비판하고 스웨덴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시장경제 모델의 이행을 위한 계급역학관계 변화와 이데올로기 투쟁 전략은 논의하지 않는 《The Economist》나 후쿠야마와 다르지 않다. 그들에겐 이행 전략이 없다.

한편, 한국의 진보정당과 민주노동운동은 스웨덴 모델의 구성요소들을 강령과 발전전략에서 거론하고 정책대안과 요구사항의 핵심 내용으로 차용하지만, 스웨덴 모델을 평등사회 대안으로 선언하고 이행전략을 추진한 적은 없었다. 진보진영의 유력 인사들 가운데 스웨덴과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인물은 노회찬이었다.

“진보정당이 꿈꾸는 건 희한한 세상이 아니에요. 꿈과 현실을 모두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어차피 현실은 현실입니다. 진보 정당이 만들고자 하는 현실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입니다” [노회찬 2014] (노회찬, 구영식 2014)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스웨덴형 모델의 특징에 대한 사려 깊은 천착이다. 그것의 이념적인 옳고 그름을 떠나 스웨덴형 모델이 가난한 보통사람들의 삶의 고통을 경감시켜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회찬 2009).

“스웨덴은 현존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친노동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가 페이퍼 위의 이념이 아니라 한 사회의 문화와 철학으로 자리잡은 유일한 경우가 스웨덴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2004] (정운영 2004).

노회찬은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현실 세계에서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잘 보호한다고 지적하며 사회민주주의를 적극적 대안으로 표방하자고 주장했다.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이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것이 사민주의라고 본다. 이 이상으로 진도나간 체제가 있는가? 현실 사회주의국가보다 노동권이 더 많이 보장되고 있는 곳이 사민주의국가다. 사민주의가 사회주의적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완결태는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앞서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향점으로 삼았다” (노회찬, 구영식 2014; 조현연 2021; 박찬수 2021).

2.2 진보적 대중정당의 길,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진보진영은 다양한 이념적 흐름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의당 당원을 대상으로 2013년 10~11월과 2014년 10~11월 실시된 정치의식 조사에서 “정의당이 지향해야 할 정치이념”으로 사회민주주의를 꼽은 비율이 53~54%로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진보적 자유주의’ 27~33%,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 9~13%, ‘사회주의’ 1~4% 등 다양한 이념적 지향성이 병존한다(진보정의연구소 2013b, 2014).

정의당원의 이념성향은 사회민주주의가 과반을 점하는 가운데, 보다 온건한 진보적 자유주의 입장이 30% 정도, 보다 급진적인 사회주의 흐름이 14%

정도로 나뉜 삼분 구도다. 사회민주주의모델을 기준으로 보면 진보적 자유주의로 분류된 대륙형 조정시장경제모델과의 이념적 거리보다 자본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과까지 포괄하는 사회주의 흐름과의 거리가 더 멀다.

노회찬은 2013년 1월 말 “진보정의당의 정체성 찾기” 집담회에서 다양한 이념적 흐름들이 함께 공존하며 진보정당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분모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적 진보정당이 하나의 사상, 유일사상을 강요할 수는 없다. 최대강령으로서의 이념적 지향은 각자의 몫이며 당은 다원적 민주주의로 이의 공존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복지국가를 열어나갈 책임있는 진보정당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의 정당을 이루는 공통분모이며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우리의 최소강령이다”(노회찬 2013; 조현연 2021). 이 집담회에서 노회찬은 2013년 1월 중순 실시된 당간부 의식조사 결과를 언급하고 진보정의당 구성원의 공통분모인 사회민주주의를 선언하자고 촉구하며 최대강령주의 입장을 비판했다. “진보정의당 당간부 의식조사에서 북유럽의 스웨덴 모델에 대한 호감도가 90%를 넘는 현실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우리가 갈 길이 전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이 과연 솔직한 태도인가?”(노회찬 2013; 조현연 2021).

노회찬의 선택은 ‘진보적 대중정당’의 길이었다. 물론 노회찬도 인민노련 시절의 사회주의 혁명 노선에서 출발했고, 2004년 민주노동당과 함께 원내 진출할 때도 진보정당의 의회정치는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었다(이광호 2023).

노회찬은 민주노동당 초기 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사회주의로 규정하며 사회민주주의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실패로 끝난 국가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혹독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한 사민주의는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다릅니다. 민주노동당은 자신이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주의, 즉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사회주의를 일단 ‘민주사회주의’라 부르고 있습니다.”(정운영 2004)

노회찬은 민주노동당의 민주사회주의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국가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 규정했다. 노회찬은 자신과 민주노동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동일시했는데, 당시 진보정당 활동가들의 이념적 지향과 정체성은 민주노동당 강령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은 강령에서 “민주노동당은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한다”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민주노동당 2000)을 천명하며 사회주의 이념적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노회찬뿐만 아니라 함께 민주노동당을 출범시킨 대다수 진보정치 활동가들도 한국 진보정당 운동을 주도하며 전략적 변화 과정을 거쳤다. 노회찬이 진보정당 운동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고민과 전략 교정 과정은 한국 진보정당의 딜레마와 전략적 선택의 궤적을 보여준다.

노회찬과 진보정치 활동가들이 진보적 대중정당의 길을 선택하며 스웨덴과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적극 주창한 핵심 논거는 세 가지다.

첫째, 다양한 이념적 흐름이 공존하며 노동계급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보정치 활동을 하려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민적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데 합의 가능한 공통분모의 최소강령이 사회민주주의 모델이다.

둘째, 스웨덴 등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나 다른 자본주의 시장경제 모델 국가들보다 노동계급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제공하고 보편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러한 사실이 현실세계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설득하고 지지를 조직하는데 유리하다.

셋째,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활동가들도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고 대중적 지지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이념적 원칙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진보적 대중정당 대신 순수 이념정당의 길을 선택하면 된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민주주의와의 이념적 거리가 아니라 진보적 대중정당과 최대강령 이념정당 사이의 전략적 선택이다.

2.3 ‘개량주의’ 낙인찍기, 실종된 이행전략

노회찬은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를 경험적으로 검증된 평등사회 대안으로 설정하고 이행전략으로 활용하자는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선택했다. 그는 스웨덴의 경험을 통해 이행전략의 성패는 노동계급 계급형성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진보정당운동의 노동중심성을 강조했다.

“사실 내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점은 이러한 스웨덴 모델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핵심은 사회에 뿌리를 둔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으로 상징되는 위력적인 운동의 힘으로,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모델이나 시스템도 작동 불가능하다는 것이 스웨덴 모델이 던지는 역사적 시사점이다”(노회찬 2009).

“지금 선진복지국가로 일컫는 나라들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최소 30%대이다, 스웨덴은 90% 육박한 노동조합 조직률을 기록하고 있다... 노동이 강해지고 노동이 당당해져야 그 나라도 더 발전하고 삶의 질도 더 높아져 간다”(노회찬 2018).

스웨덴과 시민주의를 통한 진보적 대중정당의 길은 합리적 선택이었고, 노동조합 조직화에 기초한 노동계급 계급형성이 절실했다. 하지만, 민주노동운동과 진보정치는 여전히 자기 부정을 강요하는 ‘개량주의’ 낙인찍기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노회찬은 “노동운동이 사회민주주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시민주의는 개량이고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회사, 우리 노조를 중시하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오히려 시민주의 국가들의 노동운동보다 더 보수화되고 있다. 이것이 대중성을 잃는 원인이다”고 비판했다(노회찬, 구영식 2014; 박찬수 2020).

민주노동당에서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한국 진보정당은 스웨덴과 사회민주주의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여론을 설득하는 활동에 나서지 못했다. 진보정당은 득표율 3% 저지선에 갇혀 있고, 민주노총은 조직율 5% 수준에 비호감도는 86%에 달한다. 노동계급 계급형성과 진보정당 노동중심성의 실패는 참혹하다.

스웨덴과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개량주의’ 낙인찍기로 진보정당의 이행전략이 실종되고 이데올로기 투쟁의 무기는 소실되었다. 그 결과 지배세력의 미국식 자유시장경제모델을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국민여론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고, 평등사회 대안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믿음은 형성되기 어려웠다.

3. 평등사회 대안, 스웨덴

한국인은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국가들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미국 모델을 선호하고, 평등사회 대안과 그 실현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국가사회주의 실패는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영향력과 평등사회 대안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더 강화했다.

불신하는 시민들에게 평등사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 불평등 체제의 피해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장 살기 좋은 ‘꿈의 나라’가 최선의 대안이다. 그렇다면, 스웨덴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다.

3.1 현존하는 가장 평등한 나라

국가간 소득불평등 정도를 비교하는 대표적 지표로 하위 50% 대비 상위 10%의 소득점유율 배수를 꼽을 수 있다. 세계불평등 보고서(WID 2022)의 소득분포 자료에서 시장경제모델 4유형을 대표하는 국가들의 2010년대 소득점유율 배수의 평균값을 보면, 미국이 3.45배로 가장 불평등하고 스웨덴이 1.26배로 가장 평등하다(<표 1>). 독일과 스페인은 각각 2.00배와 1.68배로 그 중간 수준이고, 한국은 2.91배로 미국에 가까운 매우 불평등한 나라다.

<표 1> 2010년대 소득집단별 소득 점유율 국가간 비교(단위: %, 배수)

2010년대	하위50%	상위10%	소득배수 (상위10%/하위50%)
스웨덴	24.0%	30.2%	1.26
독일	18.7%	37.5%	2.00
스페인	20.7%	34.7%	1.68
미국	13.1%	45.2%	3.45
한국	15.9%	46.4%	2.91
중국	14.3%	42.0%	2.94
러시아	16.7%	46.2%	2.76

자료: WID(2022).

현재 사회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중국은 개방정책을 추진하며 불평등이 꾸준히 심화되어 2010년대 소득배수는 2.94배에 달했다. 러시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전환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어 2000년대 3.67배까지 상승했다가 2010년대에는 하락하여 2.76배다.

스웨덴은 자본주의 국가가 물론 중국 등 현존 사회주의 국가나 러시아 등 자본주의 전환 국가보다도 더 평등하다. 스웨덴은 1980년 전후 소득배수 1.0 배 미만으로 노르웨이와 함께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평등한 소득분배구조를 기록했으나, 이후 완만하게나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 1.76배에서 40년 만에 갑절로 뛰며 급격한 불평등 심화 추세를 보이는 미국과 비교하면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평등하고 불평등 심화 추세도 매우 완만하다. 따라서 현재 스웨덴을 위시한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은 현존 국가들 가운데 가장 평등한 국가군을 구성하고 있는데, 향후 상당기간 그럴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스웨덴도 소득분배가 완전 평등에는 이르지 못했다. 2010년대에 스웨덴의 상위 10%는 자기 몫의 3배를 버는 반면 하위 50%는 자기 몫의 절반밖에 벌지 못한다. 스웨덴이 가장 평등했던 1980년 전후 시기도 상위 10%의 구성원은 하위 50% 구성원의 5배를 벌 정도로 여전히 불평등했지만, 자본주의 역사상 그보다 더 평등한 분배를 실현한 적은 없다.

스웨덴은 1900년 당시 미국보다 더 불평등한 사회였다. 그러나, 한 세기를 지나오면서 미국은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나, 스웨덴은 훨씬더 평등한 사회로 바뀌었다. 같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도 어떤 시장경제모델인가에 따라 불평등은 심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다.

중도 보수 경제지 《The Economist》와 미국 정치철학자 후쿠야마는 모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수행한 미국식 자유시장경제모델의 신봉자였다. 그들은 영국 총선과 미국 대선에서 대처와 레이건의 지지 선언을 했고, 냉전시대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자본주의는 미국식 자유시장경제 모델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들이 2008~09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신자유주의와 미국식 자유시장경제모델의 실패를 확인했고, 핵심 판단 근거는 미국의 극심한 불평등과 사회통합 실패였다.

《The Economist》(2013a, 2013b, 2013c)와 후쿠야마(Fukuyama 2022a, 2022b, 2022c)는 미국식 자유시장경제모델의 실패와 지속가능성 결여를 비판하며, 스웨덴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들은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추진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스웨덴 모델의 성공 비결로 평가하며 스웨덴의 벤치마킹을 독려한다.

스웨덴을 현존하는 가장 평등한 나라로 만든 데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과 함께 상대적으로 평등한 소득분배 효과도 크다. 후자는 《The Economist》와 후쿠야마가 의도적으로 간과한 요인인데, 노동계급은 계급형성 진전으로 계급역학 관계의 균형을 이뤄 자본편향적 소득분배를 저지하고 연대임금제를 통해 임금노동자들 사이의 소득격차를 억제했다.

3.2 노동-자본 상생의 포지티브섬게임

스웨덴 노동은 세계 최강이다. 스웨덴 자본은 노동보다 더 강하다. 세계 최강 노동과 세계 최강 자본이 극한 대결하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공존·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공존·상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 계급갈등을 경험하며 서로 상대를 파괴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타협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스웨덴의 계급타협은 상대를 죽이지 못해 휴전하는 부정적 의미의 타협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며 윈윈하는 긍정적 의미의 타협이다. 노동과 자본이 일방적 계급지배 전략을 포기하고 1938년 계급타협의 살트쇠바덴협약을 체결하면서 계급갈등 함정을 벗어날 수 있었다.

살트쇠바덴 협약으로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1950년대 초 자본 측 제안으로 중앙교섭이 시작되며 3단계 단체교섭체제와 함께 중앙집중화된 노사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노동과 자본은 살트쇠바덴 협약의 노사관계 자율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며 포지티브섬 게임을 정착시켰다. 이후 자본주의 노사관계 특성상 위기를 맞을 때도 있었지만 포지티브섬 게임은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되며 안정적으로 재생산되는 회복탄력성을 보여주었다.

노동은 계급역학관계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사민당 정부의 장기집권이 40년을 넘으면서 1970년대 일련의 경제민주화 장치 법제화를 추진했다. 자본측은 노동의 생산현장 통제력 강화 효과를 우려하여 샬트쇠바덴 협약의 노사관계 자율주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지적하며 LO와 사민당의 경제민주화 공세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자본측과 보수정당들의 반대에도 공동결정제와 노동조합 대표 이사제는 법제화되었고, 임노동자기금제는 원안보다 약화된 내용으로 통과되어 7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해소되었다.

자본측은 공세적 경제민주주의 법제화 시도에 항의하며 중앙교섭에서 철수하여 단체교섭체계를 탈중앙집중화하며 중앙교섭에 기반한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위태롭게 했다. LO와 산하 노조들이 조정된 산별교섭 방식으로 대응하고 SAF와 후속 SN이 소극적이거나 조정역할을 수행하면서 노사관계의 중앙집중성이 일정 정도 복원되었다.

자본측은 공동결정제와 노동조합 대표 이사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일단 법제화된 뒤에는 LO의 조직력과 사민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인정하고 경제민주주의 장치들에 적응하고 활용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사용자들은 공동결정제와 노동조합 대표 이사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경제민주주의 장치들은 노사간 상호 신뢰를 축적·강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스웨덴의 경제민주주의 장치들은 독일 등 대륙형 조정시장경제모델 국가들보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더 강화하는 방식이었는데, 스웨덴에서는 모범적으로 작동했다. 자동차 산업에서 대량생산 차종을 정지된 작업대에서 생산하는 우데발라 공장의 성찰적 생산방식은 세계 최초의 실험이었다. 우데발라 실험은 생산방식의 결정과 공장의 설계·건설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공동결정제 법규정에 따라 노사간 공동결정으로 진행되었다.

샬트쇠바덴 협약 이후 경험이 축적되고 경제민주주의 장치 도입으로 노사간 상호 신뢰·협력 관계가 생산현장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노사간 상호 신뢰는 상대의 협력을 기대하며 협력으로 호응하며 양보와 희생도 감수하는 긍정적 상호성을 실천하게 하는데, 그 위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스웨덴 경제, 특히 수출의존도 높은 제조업은 2008-09년 세계경제위기의 타격을 크게 입었다. 제조업의 금속노조와 제조업사용자협회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노사정 위기협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보수연정에 의해 거절되자, 노사 자율로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체결된 위기협약으로 노동과 자본은 인력감축을 둘러싼 첨예한 노사갈등 없이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스웨덴 경제는 다른 서구국가들보다 효율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었다.

3.3 불평등체제 피해자들의 ‘꿈의 나라’

19세기 후반 스웨덴 인구의 절반은 나라를 버렸는데, 그들은 불평등 체제의 피해자들이었다. 스웨덴은 미국 등 다른 서구국가들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불평등한 나라였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국민소득의 58%를 점유한 반면 하위 50%의 몫은 16%밖에 안되어, 소득점유율 배수는 4배에 육박하여 당시 미국은 물론 현재 미국보다도 훨씬 더 불평등했다.

그런 스웨덴이 오늘날 불평등 체제 피해자들에게 ‘꿈의 나라’가 되었다. 여성, 노인, 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불평등 체제에서 사회적 약자로 만들어진 피해자들이 차별 처우 당하지 않고 사회적 존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은 보편주의 복지제도 때문이다. 보건의료, 육아보육·노인요양 돌봄, 교육, 주거, 노후 소득안정 등 삶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와 기본재가 탈상품화되어 시장의 구매력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적으로 제공된다.

불평등 체제의 수혜자인 지배세력은 소득과 자원을 독점하고 사회서비스와 기본재의 시장 거래를 주장하며 탈상품화를 반대한다. 그에 맞선 피해자들의 세력화와 투쟁 없이는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수립될 수 없다. 스웨덴은 불평등 체제 피해자들이 만든 나라이고, 그 핵심은 노동·농민 계급동맹이었다. 사민당은 농민당과 연정 혹은 의회 연합을 형성하여 노령연금제를 비스마르크형 소득연계 연금보험제가 아니라 시민권에 기초하여 조세로 지원하는 보편주의 공적 연금제로 설계했다. 국민연금제가 모델이 되어 보건의료, 보육·요양 돌봄, 실업자 소득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보편주의 원칙으

로 수립되어 보편주의 복지국가가 건설될 수 있었다.

스웨덴은 성평등 실천에서도 모범을 보여 여성친화적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실현했다고 평가된다. 성차별 문제를 보면, 노동시장의 성별 고용률·임금 격차, 가정 내 남녀간 자녀양육·가사노동 분담, 국회의원과 대기업 고위 경영진의 여성 비율 등 거의 모든 성평등 지표에서 최고 수준이다. 시민당과 LO는 기혼여성 고용 차별 금지, 공공부문 고용 성평등, 공공 보육 서비스 확대, 소득세 개인 단위 과세, 출산휴가제의 육아휴가제 전환, 육아휴가 각부모 할당제 강화 등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수립 과정을 주도했다.

스웨덴 모델의 핵심을 구성하는 공적연금제, 보건의료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자 소득보장제 등은 보수 세력의 공격으로 후퇴·훼손과 복구 과정을 반복했지만, 성평등 개혁 조치들은 그렇지 않았다. 1920년대 기혼여성 고용 차별 금지 법제화부터 남성부양자모델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이었고, 이데올로기투쟁의 승리에 기초한 개혁조치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투쟁의 일환으로 추진된 개혁조치였다. 그런 점에서 스웨덴의 여성친화적 제도들은 일정 정도 국가 페미니즘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제도 변화가 성역할 문화와 지배 이데올로기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해 준다.

여성친화적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시민당과 LO가 여성운동단체들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성장하면서 실현한 성과물이다. 한편 보수 세력들의 공세에 맞서 여성들이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복지국가를 방어하는 복지국가 동맹의 주요 사회세력으로 결합하면서 성평등 개혁조치들의 불가역성이 강화되어 후퇴·훼손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었다.

3.4 스웨덴 모델의 효율적 작동, 검증 완료

스웨덴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구현한 현존 국가로서 유럽연합이 유럽의 사회적 모델을 수립하는데 경험적 준거가 되었다.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The Economist》와 후쿠야마도 스웨덴의 벤치마킹을 독려한 것은 스웨덴 모델의 효율적 작동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스웨덴 모델은 1932년 시민당 집권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여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주어진 사회·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시행착오와 수정·보완을 거듭하며 최적화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스웨덴 모델을 구성하는 제도들은 효율적 작동은 물론 예상하지 못한 효과까지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을 검증받아왔다.

스웨덴 모델은 상호 보완·개입하는 무수히 많은 제도들의 복합체로서 개별 제도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제도들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도 보여주었다. 스웨덴 모델의 골간을 형성하는 렌·마이드너 모델이나 노동·자본 상생의 황금삼각형은 각각 정책 패키지로 설계되어 운영되며 제도적 상보성을 입증했다.

렌·마이드너모델의 연대임금정책을 성장산업은 물론 사양산업의 해고 위험 노동자들도 수용하는 것은 한편에선 정부가 긴축 재정·경제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담보하고, 다른 한편에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연대임금제 희생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중앙집중화된 단체교섭체계가 산업·사업체 수준 교섭주체들의 엄격한 이행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황금삼각형의 유연한 고용계약 제도 하에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제를 수용하는 것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효율적 작동으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고 관대한 실직자 소득보장제도로 실업 기간의 충분한 소득보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렌·마이드너 모델과 황금삼각형은 모두 완전고용과 소득평등의 동시 실현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데,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실업율이 치솟고 불평등이 심화되면 제도 자체의 효율적 작동을 어렵게 한다. 이처럼 렌·마이드너 모델과 황금삼각형의 현 시기 성공은 이전 시기 성공을 전제로 하고 다음 시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스웨덴 모델 100년의 역사는 그 자체가 스웨덴 모델의 효율성과 성공을 입증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보편주의 복지제도는 높은 국민 조세부담률로 유지되고, 시민들이 높은 조세부담을 감내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의 탈상품화로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성평등 실현에서 다른 나라들을 앞서며 ‘여성친화적’ 보편주의 복지국가 호칭을 얻은 것은 보편주의 복지제도 덕분에 가능했다. 그런데 성평등도 유아보육과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탈상품화 등 보편주의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포괄적 차별처우 금지 및 동등처우, 소득세 부부 개인 단위 산정, 출산휴가의 육아휴가 전환 및 육아휴

가 각부모 할당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연대임금정책, 생산현장의 공동결정제, 정당의 공직 및 당내 선출직 성별 할당제 등 다양한 영역의 제도·정책들이 서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낸 성과다.

스웨덴 모델이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통합을 모두 실현한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사민당은 비그포르스의 과소수요론 시각 경제이론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1920~30년대 경제위기와 고용위기를 극복했고, LO는 렌-마이드너모델의 사회·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설계했다. 덕분에 사민당 정부는 스웨덴의 자본주의 황금기를 이끌며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사민당과 LO가 설계한 스웨덴 모델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파고와 2008~09년 세계금융위기의 충격을 이겨냈다. 스웨덴의 현재는 사민당과 LO의 정확한 실용주의 사회과학 이론에 기초한 비개혁주의적 개혁전략과 목적의식적 실천이 만들어낸 결과다. 스웨덴 모델은 그렇게 100년 기간 시행착오와 수정보완의 최적화 과정을 거치며 효율적 작동의 경험적 검증을 통과하여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4.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과 평등사회 실현

스웨덴은 평등사회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했다. 스웨덴 모델은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의 성과이며, 계급역학관계와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결과다. 스웨덴을 벤치마킹하는 전략은 물론 스웨덴을 넘어서는 전략도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이어야 한다.

4.1 스웨덴의 현재는 계급역학관계의 함수

스웨덴은 LO 중심 노동자 조직화가 진전되며 LO에 기반한 사민당은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1915년 원내 제1당이 되었고 마침내 1932년 집권하면서 스웨덴 모델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사민당과 LO는 1938년 살트쇠바덴 협약의 계급타협을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화하며 노동과 자본이 상생하는 노동시장

황금삼각형을 제도화했고 여성친화적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했다. 오늘날 스웨덴 모델은 노동계급의 계급형성과 정치세력화의 성과로 만들어졌다.

스웨덴 모델은 소득 분배를 보다 평등하게 하고, 노동시장 약자인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지원하며 고용·소득 안정성을 강화하고, 보편주의 복지제도를 통해 시민권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사회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고,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을 허물며 노동시장의 성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이러한 법제도와 정책들은 사민당과 LO가 중심이 되어 보수 정당과 기독교 세력의 저항에 맞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방어·강화했다..

모든 법제도들은 최초의 도입 단계부터 현재까지 공격과 방어, 훼손과 복원, 해체와 재구축의 과정을 반복해 왔다. 그런 점에서 스웨덴 모델의 지속가능성과 불가역성은 노동계급의 계급형성과 정치세력화, 사회세력의 연대 형성과 국민적 지지 동원의 함수다. 베네수엘라보다 브라질이, 브라질보다 스웨덴의 평등사회 모델이 지속가능성과 불가역성이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 스웨덴이 다른 선진자본주의 국가들보다 소득분배가 더 평등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이 더 강하고, 경제민주주의가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스웨덴 모델의 부침과 현재 모습은 계급역학관계의 함수로 설명된다.

사민당과 LO가 1970년대 자본과 보수정당들의 강한 반대에도 공동결정제와 노동조합 대표 이사제의 법제화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사민당이 40년 이상 장기집권하며 정치적 영향력이 극대화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자본과 보수정당들은 그 위세에 굴복했지만 뒤이어 법제화가 추진된 임노동자기금제는 강력한 저항 투쟁을 전개하며 약화된 형태의 한시적 제도로 무력화하는데 성공했다. 사민당과 LO가 공동결정제와 노동조합 대표 이사제의 법제화와 성공했지만 임노동자기금제 법제화에 실패한 것은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패배 때문이었다.

보수연정은 2006년과 2022년 총선 승리로 강화된 의회권력을 이용하여 실업자 소득보장제의 소득 보장기능을 약화하는 개혁조치를 집권 직후 밀어붙였다. 보수연정은 관대한 실업급여로 인해 실업자들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

기보다 수급자격을 갱신하며 실업급여로 연명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관대한 실업자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총선 승리와 강도 높은 개혁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반면 자본과 보수정당들은 정리해고제 후입선출 선별 원칙에 반대하며 총선 시기마다 핵심 공약으로 폐지를 단언했지만, 그동안 수차 집권했음에도 아직껏 폐지하지 못하고 부분적 예외 규정을 두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공동결정제와 노동조합 대표 이사제는 자본의 경영특권을 제약하고 노동조합의 생산현장 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법제화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제도 수립 이후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는 막강한 조직력을 지닌 LO와 원내 제1당 지위를 지키는 사민당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되고, 생산현장 상생의 안정적 노사관계가 붕괴되고 부정적 상호성의 응징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결정제와 노동조합 대표 이사제 폐지를 추진하다가는 중간계급의 저항과 노동-중간계급 연대 강화로 보수정당들의 존립 자체도 위태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2 스웨덴은 평등사회 이상향의 이행 경로

스웨덴은 현존 국가들 가운데 가장 평등하다. 하지만 여전히 평등한 다이아몬드형보다 불평등한 피라미드형에 가깝다. 그렇다면 스웨덴보다 훨씬 더 불평등한 전형적 피라미드형 한국사회가 완전한 다이아몬드형의 평등사회 이상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분명한 것은 이행경로에서 스웨덴을 경유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역사상 1980년 전후 스웨덴보다 더 평등한 사례는 없었다. 자본주의 사회가 도달할 수 있는 평등사회의 최고치를 스웨덴이 보여줬고, 현존하는 사회들 가운데 최고치도 역시 스웨덴이다. 자본주의 체제가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불가침권으로 보호하고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자산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웨덴이 완벽한 평등을 실현하지 못한 원인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높은 자산수익률을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자본주의 체제다. 둘째는 노동계급을 위시한 불평등 체제 피해자들의 강력한 주체 형성 실패다. 그럼에도 스웨덴이 자본주의 사회들 가운데 가장 평등한 것은 불평등 체제 피해자들의 주체 형성에서 가장 성공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가 평등사회 이상향으로 나아가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첫 단계는 현재 위치에서 스웨덴으로 이행하는 경로고, 둘째 단계는 스웨덴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평등사회 이상향으로 이행하는 경로다. 스웨덴은 자본주의 체제의 경계를 넘어 사회주의 체제로 진입하는 체제 경계의 체크포인트라 할 수 있다.

이행경로의 두 번째 단계는 이행경로와 이행비용 모두 불분명하고 불확실하다. 그것은 국가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했고, 민주적 시장사회주의는 아직 국가 단위에서 검증된 바 없기 때문이다. 반면, 첫 번째 단계는 스웨덴의 경험이 이행경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제도개혁의 시행착오 및 기득권세력의 저항과 사회적 갈등에 따른 이행비용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스웨덴을 경유하는 전략이 합리적 선택이다.

4.3 스웨덴 모델은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의 결과물

오늘의 스웨덴은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의 결과물이다. 스웨덴 노동계급은 계급형성과 정치세력화에 성공했고,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불평등 체제 피해자들을 수혜자로 정치적 지지를 조직하며 방어동맹을 형성했다. 그렇게 평등사회를 건설하고 방어하는 사회·정치적 주체를 형성하여 저항과 갈등을 겪으며 제도 개혁을 추진했는데, 성공과 승리를 축적하며 현재의 스웨덴 모델을 건설했다.

제도개혁의 승패는 계급역학관계와 이데올로기 투쟁의 결과인데, 주체 형성의 성공 정도에 의해 좌우된다. 그 핵심은 노동계급의 LO 중심 계급형성과 사민당을 통한 정치세력화인데, 노동계급이 보편 계급이익과 보편 사회이익에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스웨덴 노동계급이 계급형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LO가 조직 노동의

특수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노동계급의 보편이익을 대변하며 계급의 내적 통합 강화와 조직력 확대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연대임금제는 성장산업 고이윤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저임금 특례조치로 노동계급 내 임금격차를 최소화했다. 공동결정제와 노동조합 대표 이사제는 노동조합의 생산현장 통제력을 강화하고 사업체 수준에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했지만 노동조합은 총연맹의 가이드라인과 산별 노조의 지휘로 기업별 노조주의와 경제적 실리주의(business unionism)에 빠지지 않고 계급적 연대를 실천했다. 정규직-비정규직 동등처우 원칙과 파견 노동자 고용-임금 안정성 보장 장치는 노조원이 직접고용 정규직보다 높은 비정규직 임금을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결과 사용자는 가중된 인건비 부담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최소화했고 노동계급은 내적 통합을 강화할 수 있었다.

LO가 노동계급 안팎에서 도덕적 지도력을 행사하고 사민당이 불평등 체제 피해자들을 규합하며 장기간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LO와 노동계급이 계급적 이해관계에 갇히지 않고 전체 사회의 보편 이익을 대변했기 때문이다. LO가 설계하여 사민당 정부가 집행한 렌-마이드너모델은 노동이 중앙교섭을 통한 임금인상 억제를 수용하여 물가안정을 담보함으로써 스웨덴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연대임금정책은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약한 사양산업의 정리해고를 노동자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물적 자원과 노동력의 이동을 수반하는 경제구조 재편과 산업구조 고도화 과정이 일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LO는 2016년 육아휴가의 각부모 할당제를 남녀 각각 8개월 반분 원칙을 제안했으나 법제화하지는 못하고 각부모 할당 개월수를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데 그쳤지만 복지국가의 ‘여성친화성’을 강화하고 성평등을 실천하는 진정성을 보여줬다.

4.4 스웨덴 모델 넘어서기 과제

사민당과 LO가 제도개혁의 성과를 통해 스웨덴 모델을 형성·강화했지만 제도개혁 과정에서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가장 치명적인 실패는

임노동자기금제의 법제화였다.

LO가 사민당과 함께 경제민주주의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공동결정제와 노동조합 대표 이사제의 법제화는 성공했으나 임노동자기금제의 법제화를 추진하며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패배한 것은 LO의 전술적 과오 때문이었다. LO는 노조원들의 소극적 태도가 바뀌지 않자 임노동자기금제 추진을 정당화하고 노조원들의 지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회주의로 가는 민주적 경로’라며 공격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민주적 사회주의 이행은 정당한 전략으로 시점 선택도 적절했었지만, 대중적 홍보 방식은 ‘전술적 멍청함’이었다.

LO는 사민당과 함께 1920~30년대 과소수요론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할 때부터 민주적 방식의 사회주의 전환이라는 점진적인 비개혁주의적 개혁 전략을 실천해왔다. 하지만 사회주의 이행 선전은 자본의 위기의식을 자극하여 국적 자본 형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동조하던 초기의 소극적 지지 입장에서 극단적 반대 입장으로 급변시킨 계기가 되었다. 사무직 TCO도 찬성 입장에서 중립적 유보 입장으로 후퇴하자, 중도 정당들도 중립 혹은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LO의 전술적 과오는 자본측에 이데올로기 투쟁의 승리를 안겨줬고 노동-중간 계급연대 형성에 실패하며 계급역학관계에서도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결국 임노동자기금제로 경제민주주의 법제화를 완성하고 민주적 사회주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려던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스웨덴을 벤치마킹하며 스웨덴 모델 추진 주체의 성공·승리 전략은 답습하되 실패·패배 전략은 성공·승리 전략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이 스웨덴 모델을 실현하는 첫 번째 이행경로의 과정을 단축하며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한편, 스웨덴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두 번째 이행경로를 통해 평등사회 이상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제도 개혁의 전제조건은 노동계급의 계급형성과 정치세력화를 중심으로 한 주체형성이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수준에 불과하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비호감도는 86%에 달하고, 진보정당은 3%의 득표를 장벽을 넘어서기도 어렵다. 노동계급의 계급형성과 정치세력화 성공으로 스웨덴 모델을 실현하는 이행경로의 첫 번째 단계를 완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스웨덴도 노조조직율이 10% 수준으로 추락하고 LO의 비호감도가 80%를

넘어서고 사민당 지지율이 5%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스웨덴 모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정리해고제의 후입선출 규정은 삭제되고, 공동결정제와 노동조합 대표 이사제도 폐지되거나 유명무실화된다. 더 나아가서 세계 최강 자본은 계급갈등 함정의 비용을 감수하며 무력화된 노동에 대해 일방적 계급지배를 시도할 것이다. 반면, 노조조직율이 90% 수준을 회복하고 사민당이 지지율 50%를 넘어서며 다수와 정부로 집권한다면 임노동자기금제와 민주적 사회주의 이행을 다시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스웨덴 모델도 계급역학관계 변화에 따라 형성-훼손-해체-재구축의 과정을 겪는 계급역학관계의 함수다.

한국이 스웨덴 모델을 얼마나 충실하게 구축할 수 있는가는 노동계급 계급형성과 정치세력화의 성공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공동결정제의 경우도, 계급형성에서 스웨덴 수준의 성공을 거두면 노동조합이 공동결정 주체가 되는 스웨덴식 포괄적 공동결정제를 수립할 수 있고, 독일 수준만큼 진전된다면 독일식 노동자 이해대변 이중구조의 틀 내에서 현행 노사협의회의 노동자 대표 개입수준이 강화된 직장평의회로 전환할 수 있다. 물론 계급형성이 진전되지 않으면 현재 수준의 유명무실한 노사협의회 방식을 유지한 채 계급갈등 함정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다. 보편주의 복지제도나 복지국가의 여성친화성 실현도 마찬가지다.

《참고문헌》

- 노회찬(2009).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2009년 대한민국, 위기 진단과 해법 찾기』, 서울: 노회찬마들연구소.
- 노회찬(2013). 『진보정치의 위기와 정체성 찾기』, 진보정의연구소 집담회 <진보정의당의 정체성 찾기>.
- 노회찬(2018). “공공연맹 위원장 이취임식 축사: 노동조합 조직률 상승, 복지국가의 지름길”, 기자뉴스, 2018.2.25. <https://www.kijanews.co.kr/3892>
- 노회찬, 구영식(2014).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노회찬, 작심하고 말하다』, 서울: 비아북.
- 민주노동당(2000). 『민주노동당 강령 <민주 평등 해방의 새 세상을 향하여>. 민주노동당』, 2000.1.30.
- 박찬수(2020). “박찬수의 ‘진보를 찾아서’ _08: 진보정당은 왜 ‘사회민주주의’를 내걸지 못할까”, 한겨레, 2020.10.19.
- 박찬수(2021). 『진보를 찾습니다: 진보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서울: 인물과사상사.
- 이광호(2023). 『노회찬 평전』,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정운영(2004). 『우리 시대 진보의 파수꾼 노회찬』, 서울: 랜덤하우스중앙.
- 조현연(2021). “그렇다면 진보정당이 집권하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노회찬의 나라 밖 인물 산책 ㉔] part 3 북유럽 복지모델을 만나다 : 타게 에를란데르 上”, 프레시안, 2021.12.08.
- 진보정의연구소(2013a). 『당 주요간부 의식조사 (1차)』, 간단 요약문. 진보정의연구소. 2013.1.20.
- 진보정의연구소(2013b). 『2014 정의당 당원 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 진보정의연구소. 2013.1.20.
- 진보정의연구소(2014). 『2014 정의당 당원 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 진보정의연구소. 2014.11.
- Economist (2013a). “[The Nordic countries] The next supermodel: Politicians from both right and left could learn from the Nordic countries”, *The*

- Economist*, 2013.2.2.
- Economist (2013b). “[Specal Report] The Nordic Countries: Northern Lights”, *The Economist*, 2013.2.2. pp.2-4.
- Economist (2013c). “[Lessons] The Secret of their success: The Nordic countries are probably the best-governed in the world”, *The Economist*, 2013.2.2.
- European Commission (2005). *Working Together for Growth and Jobs: A New Start for the Lisbon Strategy*. Communication to the Spring European Council from President Barroso in agreement with Vice-President Verheugen. 2005.2.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Fukuyama, Francis (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 Fukuyama, Francis (1995). “Reflections on the End of History, Five Years Later”, *History and Theory*, 34(2), 27-43.
- Fukuyama, Francis (2011a). “Dealing with inequality”, *Journal of Democracy*, 22(3), pp.79-89.
- Fukuyama, Francis (2011b).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 From Prehuman Times to the French Revolutio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Fukuyama, Francis (2022a). *Liberalism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Fukuyama, Francis (2022b). “Los neoliberales fueron demasiado lejos. Ahora hacen falta más políticas socialdemócratas”, [인터뷰어 Sergio C. Fanjul], *El País*, 2022.9.6.
- Fukuyama, Francis (2022c). “The end of history is history: Francis Fukuyama on liberal democracy and its discontents.” [인터뷰어 Sean Illing], 2022.6.6.
- IMF (2017). *Fostering Inclusive Growth. G-20 Leader’s Summit*. IMF.
- Rodrigues, Maria João (2009). Europe, globalization and the Lisbon Agenda: an introduction, In Rodrigues, Maria João (Eds). *Europe, Globalization and the Lisbon Agenda*. (pp. 1-19). UK: Edward Elgar.

SEJ[Social Europe Journal] (2008). What is the European Social Model?. *Social Europe Journal*, 4(1).

WID (2022).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WID.

World Bank (2005). *World Development Report 2006: Equity and Development*.
World Bank.

World Bank (2018). *Fair Progress: Economic Mobility across Generations*.
World Bank.

<Abstract>

Talking about Sweden in an Inheritocratic Society: Why not Sweden?

Cho, Donmoon*

In the late 19th century, Sweden was a country where half its population either starved to death or left the country. It was the working class and other socially disadvantaged groups who made Sweden a “dream land” for the victims of inequality. Sweden became a benchmark because it succeeded in realizing both economic efficiency and social integration at the same time.

This article proposes benchmarking Sweden for five reasons.

First, Sweden is the most egalitarian country that currently exists.

Second, it has succeeded in achieving mutual coexistence between the world’s strongest capitalists and the world’s strongest laborers.

Third, Sweden has become the most desirable place for victims of inequality, including women.

Fourth, the fact that the Swedish model works efficiently has been empirically verified.

Fifth, even if we seek to overcome Sweden’s limitations and build an even better ideal society, we still need to pass through Sweden on our way to the destination.

Key Words: Sweden, inheritocracy, inequality, transition strategy, non-reformist reform

* Department of Soci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성명: 조돈문
소속: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E-mail: chodon333@gmail.com

논문 접수일: 2025.12.07.
게재 확정일: 2025.12.08.

논문심사 완료일: 2025.12.08.